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

2014. 12. 22.

관계부처 합동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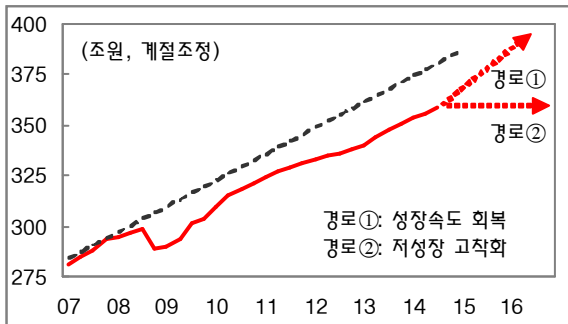
I. 2014년 경제운용 평가	1
II. 향후 경제여건	3
III. 20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8
IV. 2015년 경제정책 과제	10
1.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	10
(1)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2) 금융 역동성 제고	
(3)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4)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2.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	19
(1) 확장적 거시정책	
(2) 소비 여건 개선	
(3) 투자 의욕 고취	
(4)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30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2)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3) 자본유출입 대응	
4.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	34
V. 2015년 경제전망	36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	37
[별첨 1]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39
[별첨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41

I. 2014년 경제운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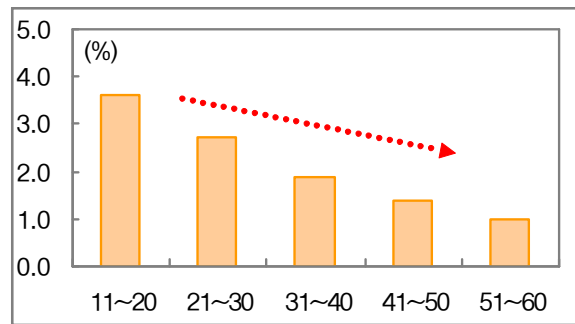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구조개혁의 시발점 마련

- 우리 경제는 비정상적 관행 지속, 성장동력 저하, 부문간 불균형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내재
 - 지속되면 저성장 고착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힘든 상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일)을 마련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 추진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향후 5년간 4.4%p(누적) 제고 가능(G20, '14.11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잠재성장률 추이(KDI)



2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회복과 경제혁신 모멘텀이 약화

- '13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세월호 충격('14.4월) 등으로 크게 부진
 - * 민간소비 (전기비, %): ('13.3/4)1.0 (4/4)0.6 ('14.1/4)0.2 (2/4)△0.3 (3/4)1.0
 - * 설비투자 (전기비, %): ('13.3/4)2.7 (4/4)5.6 ('14.1/4)△1.9 (2/4)1.1 (3/4)△0.5
-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소비·투자의 구조적 약화가 함께 표출된 결과
-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경제·사회 전반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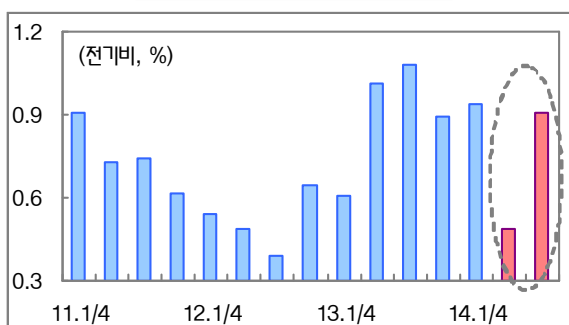
③ 새 경제팀의 과감한 기초 전환으로 침체된 분위기 일신

- 새 경제팀 출범(7.16일) 후 축소균형을 방지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 경제혁신을 재가동
 - **(경제활력 제고) 확장적 거시정책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추진하여 경제 회복 모멘텀을 강화
 -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7.24일), 부동산 대책(9.1일), 확장적 예산안 편성(9.18일), 4/4분기 내수보완대책·엔저대응과 활용방안(10.8일)
 - **(소득 선순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과 자영업 자생력 제고 등 구조적 내수부진의 돌파구 마련
 - * 2014년 세법개정안(8.6일), 사적연금활성화방안(8.27일), 장년고용·자영업자 대책(9.24일), 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대책(10.15일)
 - **(경제혁신 재가동) 공공·금융·서비스 등 핵심분야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
 - *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7.31일), 금융권 보신주의 혁신 방안(8.26일),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8.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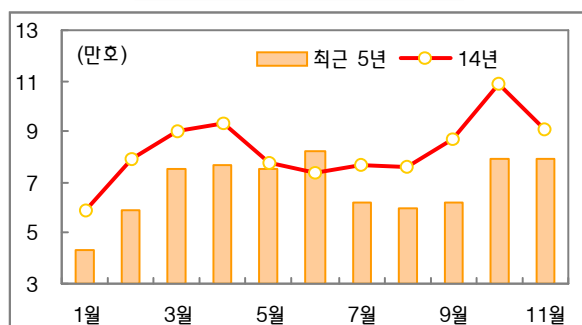
④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살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 마련

-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성장률이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
 -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 기대감을 확산하고 구조개혁의 모멘텀을 이어가 지속적·안정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

분기별 GDP 성장률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II.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① 세계경제 · 교역은 완만하게 개선,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相異

- '15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 일본 · 중국경제의 부진 ·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유로존 · 일본은 구조개혁 지연 · 소비세 인상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며 디플레 우려 · 재정위험 부각 등 불확실성 상존
 - 중국은 내수중심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인도 등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신흥국 경기는 점차 개선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4.10월,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14년	3.3	1.8	2.2	0.8	0.9	4.4	7.4	5.6
'15년	3.8	2.3	3.1	1.3	0.8	5.0	7.1	6.4

* 세계교역증가율(IMF, %): ('14)3.8 → ('15)5.0

②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 유가는 하향 안정세

- 美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 달러인덱스: ('11)76.5 ('12)80.6 ('13)81.5 ('14.1~9월)81.0 (10월~現)87.0
 -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존 · 중국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위험 산재 등으로 '15년 중 불확실성 지속 예상
- 국제유가는 수요부진, 셰일오일 공급확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은 제약요인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4년	'15년				
			연간	1/4	2/4	3/4	4/4
에경연('14.12월)	Dubai	98	73	69	72	76	78
PIRA('14.12월)	Brent	100	76	74	73	76	80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PIRA(석유산업연구소)

2 국내경제 여건

1 [경 기] 세계경제 회복흐름,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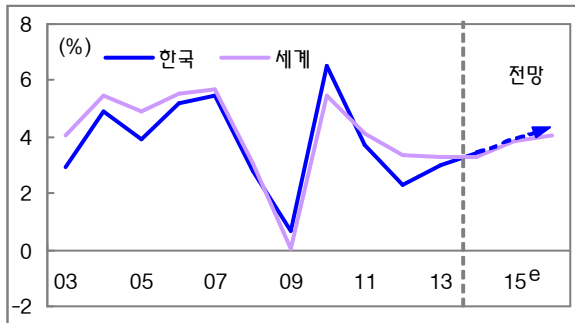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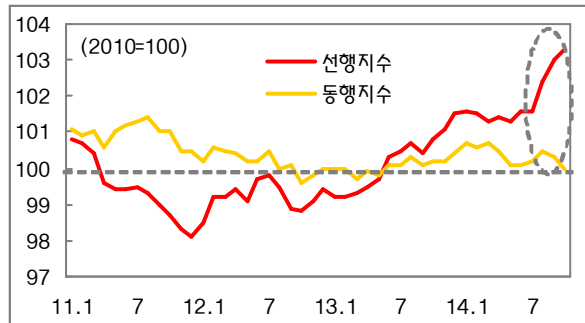
○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 [내 수] 정책효과 등으로 완만한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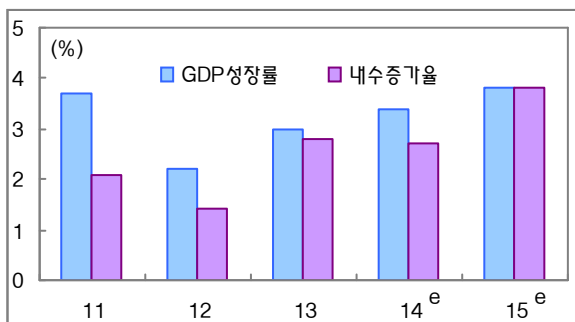
□ 민간소비가 소득·자산여건 개선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고 투자도 주요 선행지표들이 양호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개선

*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 %) : ('14.1/4)17.9 (2/4)4.4 (3/4)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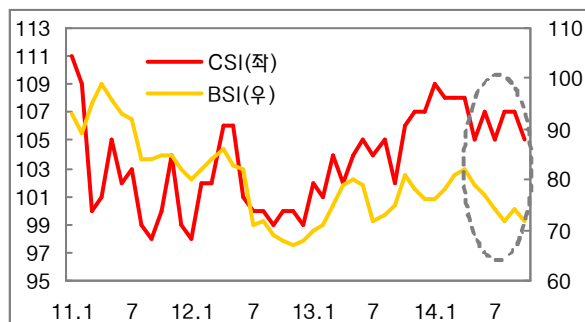
* 아파트분양(만호, 부동산114) : ('14.1/4)4.1 (2/4)10.3 (3/4)6.4 (4/4^e)15.8

□ 다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 구조적 요인 등에 따른 최근 소비·투자심리 회복 지연은 부담 요인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소비·기업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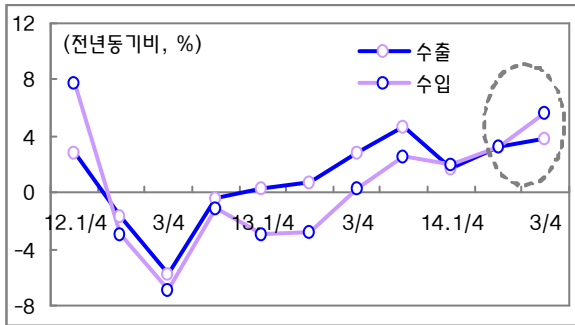
③ [수출입] 수출은 증가, 경상수지 흑자폭은 둔화

-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개선되며 수출(통관기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가공·중계무역(無통관) 부진은 총수출 회복세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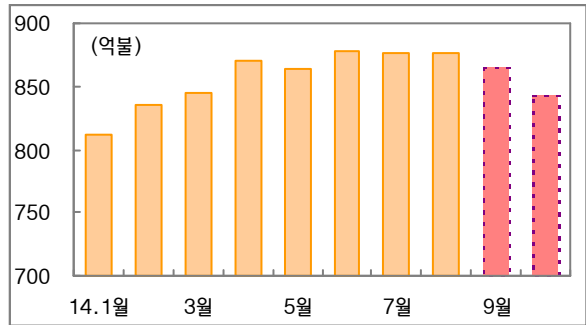
* 세계교역량(전기비, %) : ('14.1/4)△0.6 (2/4)0.7 (3/4)2.0
 * 중계무역수출(전년동기비, %) : ('14.1/4)8.7 (2/4)1.8 (3/4)△15.2

- 내수 개선 등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유가하락이 흑자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감소폭 제한

수출입 증가율



경상수지(12개월 이동 누적 기준)



④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 경기개선, 청년·여성층 고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 예상

- 상용직 중심의 양호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 노력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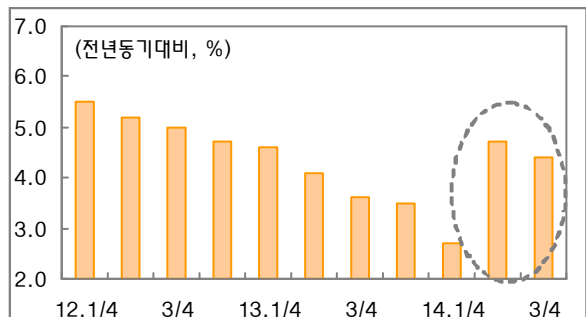
* 상용직 취업자 증감(만명): ('14.1/4)60.6 (2/4)47.8 (3/4)33.3 (10~11월)34.7
 * '14년 상반기 중 10대기업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6,500명 채용

- 그간 임금상승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협약임금 추이 등을 감안시 향후 개선 가능성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	'14.1/4	2/4	3/4
50대 이상	43.4	54.1	41.9	40.7
청년층	△5.0	9.7	5.3	10.2
여성	20.0	35.7	23.6	24.9

협약임금 상승률



5 (물가·부동산)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택시장은 정상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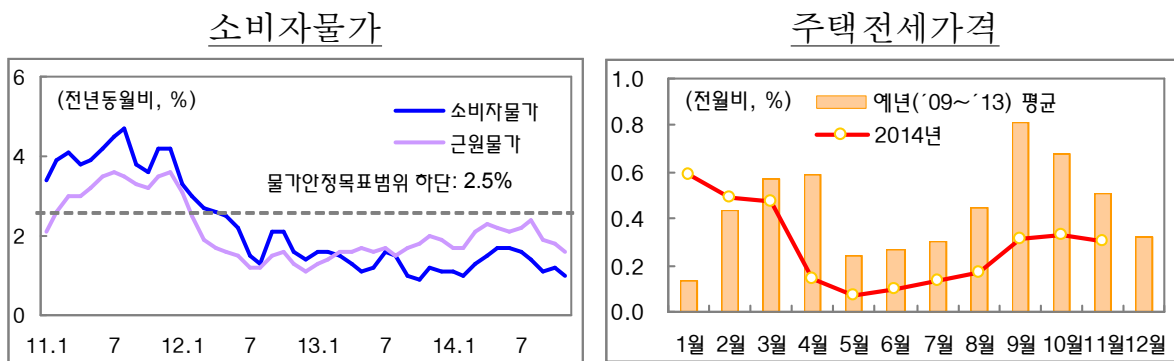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하락압력이 있으나 내수개선, 농산물가격 변동 가능성*,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상승폭 확대

* '15년 재배면적 전망(전년대비, %): (양파)△7.9 (마늘)△4.0 (배추)△5.6

- 주택매매시장은 정부정책 효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정상화 과정을 지속

* 주택가격상승률(전기비, %): ('14.1/4)0.7 (2/4)0.1 (3/4)0.4 (10)0.2 (11)0.2
주택거래량(전년동기비, %): ('14.1/4)62 (2/4)△18 (3/4)68 (10~11월)14

-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등 구조적인 시장변화로 상승세 요인 상존



6 (리스크) 가계부채, 기업실적 부진·美 금리인상 가능성은 부담

-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향후 경기흐름의 위험요인

- 가계부채 부담이 가계의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

*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잔액기준, %): ('12)80.2 ('13)78.7 ('14.10월)72.6

- 유로존·中·日의 경기둔화와 엔화약세 지속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주력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 美 자동차시장 점유율(%), 1~10월, '13/'14): (韓) 8.2/8.0 (日) 37.1/37.8

** 취약업종: 조선·해운·건설 등→ 정유·석유화학 등 확대 우려

- 美 금리인상이 급격하게(disorderly) 진행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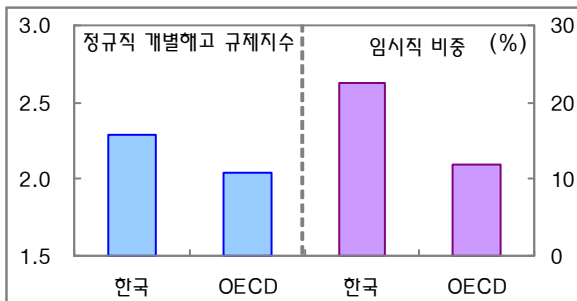
* 버냉키 쇼크('13.5.22~6.25) 시 주가(%): (韓)△10.6 (신흥)△15.4 (선진)△6.6

3 구조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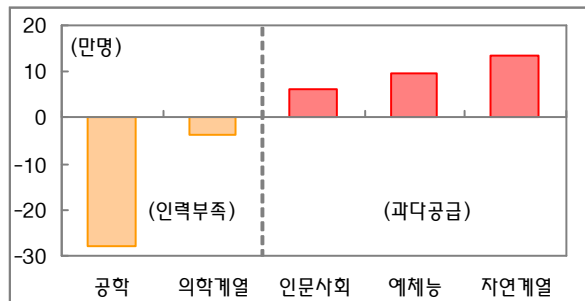
① [인 력] 노동·교육 부문 낙후성은 우리 경제 도약의 제약요인

-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
 -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생산성 둔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약
 - 교육이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수급 불일치 심화, 청년고용 부진 등의 문제를 야기
 - * 청년고용률(15~24세, '13, %): (韓)24.2 (美)46.5 (英)46.7 (OECD)39.3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17년부터) 등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와 노동 생산성 개선 지연이 제약 요인

노동시장 국제비교('13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3~'23)



② [금 융] 금융산업의 보신주의 관행 등 비효율성이 여전

- 금융산업의 보신주의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제약
 - 소극적인 대출·투자 행태로 시중자금이 실물경기 회복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
 - * 통화승수(M₂ 기준, 배): ('08)26.2 ('10)24.3 ('12)21.9 ('14.1/4~3/4)19.5
 - * 회사채 순발행(조원, '14.1/4~3/4): (AA이상)8.3 (A)△5.9 (BBB이하)△3.7
 -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부가가치, 고용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 * 금융업 비중(GDP 대비, %): ('11)6.4 ('12)6.1 ('13)5.5 ('14.1/4~3/4)5.4
 -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11)38 ('12)△4 ('13)22 ('14.1/4~3/4)△20

Ⅲ. 20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
 -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 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 경활참가 확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
- ◇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
 -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
 - R&D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
 - 민간 임대주택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여 주거안정 도모
- ◇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 추진
 -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유도
 -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비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
-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 시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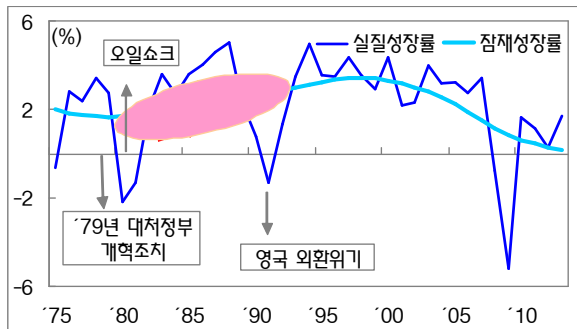
◇ **과거 주요국도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英·獨·북유럽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획기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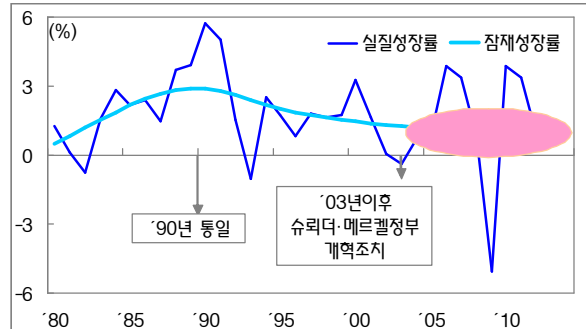
- (영 국) 대처정부('79~'90) 시기 금융·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개선 노력으로 상당기간 잠재성장률 상승세 유지
- (독 일) '00년대 노동·재정개혁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
-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은 재정·교육부문 구조 개혁으로 '08년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견실한 경제체질 유지

* (남유럽, '09) 재정적자 $\Delta 12 \sim \Delta 5\%$ (북유럽, '09) 재정적자 $\Delta 3\%$ 이하

영국 성장률 추이



독일 성장률 추이



□ 주요국 구조개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금융·노동·교육 개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

- (금 용) 은행업과 증권업간 영역 철폐, M&A를 통한 대형 은행 육성 등 금융자유화로 금융업 경쟁체제 구축(예: 영국)
- (노 동)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 고용조정 규제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획기적 제고(예: 독일*)

* 독일 고용률(15~64세 기준, %): ('03)64.6 → ('13)73.3

- (교 육) 학년제 폐지 등 학제개편, 진학경로 다양화, 전일제 학교 등 교육개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예: 독일, 핀란드)
- (공 공) 대대적 연금개혁(수급 연령·수준 개편 등) 실시, 과도한 복지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 추진(예: 영국, 독일, 북유럽국 등)

IV. 2015년 경제정책 과제

1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

- 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건전성) 재정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경쟁요소 강화
 - (효과성)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高위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 도입으로 민간투자 확대
 - (공공기관) 모든 기관의 기능·조직을 재설계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추진
- ② 경쟁촉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금순환 촉진
 - (경쟁촉진) IT·금융융합(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보험·증권사 업무 확대 등 칸막이 완화
 - (외환규제)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 전면개편
 - (모험자본 등)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회 확대
-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 등을 통한 생산인력을 확충
 -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
 - (생산인력 확충) 비자제도 개선·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여성 경활참가율을 제고
- ④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 조기육성
 - (산학협력) 산업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전문대 계약학과의 중장년층 ICL 확대적용
 - (학교교육)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15년부터 공론화)

(1)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 ① (재정건전성 강화) 예산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연금 개혁 등으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

【예산 개혁】

- '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 *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
 - 재정사업 유사·중복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15.上)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 단속
 -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 검토(관련 연구용역 실시, 3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5→1억원) 하고 비과세·감면(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 실시
- '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15.上)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 수립

【연금 개혁 등】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 연금의 개혁안 마련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고 경쟁요소 강화*
 - *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평가 강화방안 마련 등
-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16년末)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 추진
 - *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지불제도(예: 요양병원 등) 개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② (재정효과성 향상) 민간투자 위험분담 등 마중물 역할 강화

【민간자본 참여 제고】

-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도시재생기반시설 포함 등)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
 -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14년에 승인된 11개(4.3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토지보상지원 강화와 토지선보상 제도 지자체 사업 확대 적용
- 고위험·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창의적 민간투자 유도
 - 청년창업펀드(재정 700, 민자 300억원)에 GAP 펀드방식* 도입으로 민자를 확대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
 - * 재정과 민간 매칭펀드 조성시 재정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우선 수익 배분
 - ** 성과평가를 거쳐 창업초기·벤처기업과 SOC 투자 등으로 확산
 -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하여 손익공유형 투자방식(假稱 BOA)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 *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철도, 경전철, 항만, 환경시설 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편익시설 확대

【재정시스템 개선】

-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예: 학생수 비중 제고)하고 인력구조 조정, 학교 통·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③ (공공기관 정상화) 핵심역량 집중과 중복기능 재조정 추진

- 대내외 환경변화, 민간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점검하여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 포함) 기능·조직 재설계
- 4대 부문* 완료 후 국민수요가 높은 우선분야(예: SOC, 문화 등)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촉진
 - * (정보화) 여러 기관 중복 ICT R&D 관리 및 정보화지원 기능 일원화(해외투자) 기능간 중복해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기관간 업무조정(중기지원) 중소기업 전문기관 육성,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변경(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기능 강화

(2) 금융 역동성 제고

◇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 촉진

- 1 [1] (경쟁촉진)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
 - 핀테크(Fintech)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 마련(1월)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 검토
 -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 * 예) 펀드판매대금(증권), 보험금(보험)에 대한 자금이체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 강화
 - * 대출(일반+기업) ≤ 자기자본 100% → 일반, 기업 각각 ≤ 자기자본 100%
 - ** 프라임브로커는 증권관련만 신용공여 → commodity·파생상품 등 확대
 -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 * 다만,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등 대외안정성 요인을 감안하여 건전성 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
 - 국민·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 검토
 - *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 →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 가능
 -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 * 헤지펀드·PEF 규제 완화, 독립판매채널·복합점포 활성화 등
- 2 [2] (외환규제 개선)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

- ③ **(모험자본 활성화)** 자금이 실물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모집에서 회수까지 **순과정에 이르는 모험시장 지원체계 구축**
- **(모 집)**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운용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 완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자제도 도입 등
 -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 기록관리기관 지정, 중개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사전준비
 -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발행·투자 내역 관리, 중개업자는 펀딩 포털 운영
 - **(조 달)**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3월) 하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 확대
 - * 기술신용대출펀드 확대(1천억원→3,250억원), 벤처기업확인 기술성 평가시 기술신용평가 준용,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 투자펀드 조성(3,000억원) 등
 -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확대(은행 등→ 상호금융사 포함) 등을 통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 * 분리과세 혜택 일몰 연장('15년未), 편입비중에 따라 공모주 우선 배정
 - **(회 수)**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1부)의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 마련
 - 세컨더리펀드 조성(2,000억원) 및 정책성 펀드의 舊株인수 (10%내외) 유도 등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여건 마련
- ④ **(정책금융 효율화 등)**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규모 조정
- * 경영성과 개선율, 고용창출 증가율, 정책성과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
 - 수혜기업 이력관리로 중복지원 방지,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12년) 지원규모 감축강화(예: 보증요율 대폭 상향)
 -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역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기능 재조정 방안 마련
 -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사전예방 및 컨설팅 방식의 감사 활성화 등 추진

(3) 노동 유연성 · 안정성 제고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 등을 통한 생산인력 확충

- 1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
 -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 추진

- 2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수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
 - * (현행)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 부여→ 3년 체류시 영주자격(F5) 전환
 -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 검토
 -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 추진
 -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희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필요 업종 추가선정 검토
 - *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 한도 확대(120→140%) 추진

- 장기간(10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

○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

* 상시 이견 조정,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 설치 등 검토

③ **(여성경활참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 지난 10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보육 부담완화 등을 통한 출산을 제고,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등 개편

○ 민관합동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통해 5~10년 시계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발간('15.下)

【여성경활 참가 확대】

○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15.下)

* '15년 모델개발시범사업 실시 후 '16년부터 본격추진

○ 고운맘 카드 가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신·출산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3월)

○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공공부문 콜센터의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 유도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

* 시간제, 여성채용 주요사업장 대상 점검 및 교육 강화(年 2회, 1,000개), 기간제·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 개정 또는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4)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의 조기 육성

- ①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

【산학협력 대학지원】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

*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교에 '15년 2,240억원 지원 계획

-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15년부터 정부지원금* 대폭 차등화

* 등급별 정부지원액 (현재) 32~58억원 → (개편) 20~80억원

-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 하여 모범사례로 확산('16년도 예산)

* 현행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의 3~4배 수준 인센티브 지원

-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15.3/4)

【先취업·後진학 확대】

-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 강화**

* 계약학과 입학비율 및 운영성과 등을 감안 정원제한(입학정원의 10%)을 추가확대(최대 20%), 산업체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건물에도 설치 허용 등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시 채용조건형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17년 50%)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대상 계약학과를 채용조건형까지 확대 등

-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이내),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당초 3→9개교),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선도적 방안 강구
 - *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후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확산 유도
-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에 대해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소질 등을 우선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 확대('14→'17년: 11→20%)
- 재학생·고교졸업자·대기업 등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확대
 - * 전체 참여기업 수: ('14.10월) 1,797개 → ('15) 3,000개 이상 목표

② (교육시스템 개편) 학제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창의인재 양성

【학교교육 개선】

- (가을학기제 등)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하여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
 -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이들 방안 등의 도입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추진('15년부터)
 - * 전국토론회, 학부모·교사 등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
- (자유학기제 확산*)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반영 등 제도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
 -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참여 중심 수업,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13년 도입, '15년까지 단계적 확대 후 '16년 전면 시행

【대학 경쟁력 강화】

- (強小대학 육성) 종합대학 중심의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대학내·대학간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대학특성화 사업과 연계)
- (전문대 기능회복)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제 개편
- (사이버대학 質제고) 고졸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質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 추진
 -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2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

- ①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
 - 재정을 조기집행(58%)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②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으로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 (소득)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 등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해외진출과 직업훈련 강화로 청년고용률 제고
 - (생활물가) 주거·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
- ③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 (신성장동력) R&D 지원제도 혁신, 융합신제품 신속인증을 통한 조기사업화 등 추진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별 애로해소를 병행 추진하고 노후산단의 스마트화 추진
 - (투자프로그램)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産銀, 15조원)하여 신성장·주력산업 혁신 등에 30조원 투자 유도
 -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확립, 외국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촉진과 중기·서비스업·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병행
- ④ 민간주도 임대주택산업의 유망산업 육성으로 주거안정 도모
 - (규제개혁) 공공기관 보유토지 적극활용,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택지·건설 인센티브 제공
 - (금융·세제지원) 주택기금 금융지원, 임대주택 리츠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
 - (수요기반 확충) 장기 재무투자자 참여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도시형 레지던스 등 공급 주택 다양화

[1] 확장적 거시정책

◇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

- ① **(재정정책)**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 SOC 등 경기과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60% 이상 조기집행
 -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a」 정책패키지의 잔여분(15조원 수준)을 최대한 조기집행
- ②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
- ③ **(환율정책)** 美 금리인상, 日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통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2] 소비여건 개선

◇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 ① **(소득 향상)**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간 연계 강화
 -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15.下)
 - * 1차 통계(근로시간, 산업생산지수 등) 및 2차 통계(생산성 지표) 작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업종별 지표의 정확성·신뢰도 제고
 -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및 위반시 제재강화 방안 도입
 - 최저임금 기준 위반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시행

② (배당확대 등)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와 자사주매입 지원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 확대

* 과소배당 판단기준·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기준 마련, 주주관여 등

-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③ (연금보장 강화)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 제고

- '주택연금+의료비보장보험' 연계를 통해 유동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 마련

* 주택연금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합리적 정비(<현행>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개선> 부부일방이 60세 이상)로 주택연금 이용가능성 제고

-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의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 확대

* 예) (14)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및 5백만원 이내 → (15) 2배 및 7.5백만원 이내

④ (일자리 확대) 해외진출·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지원

- 국가별(선-후진국)·취업단계별(준비-구직-취업후) 지원, 추진·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전략적 개척

-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 마련(15.下)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훈련기관 평가 강화**, IT 인프라 확충을 통해 효율화

*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조정, 취업률과 연계한 훈련비 지원방식 도입 등

**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통해 사전적으로 부실훈련기관 진입제한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도 개선,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기준 재설계* 등 성과 제고 방안 마련

*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인정기준 조정을 통해 기업훈련 활성화

- ⑤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하고 유통구조와 생활밀착형 독과점 개선 병행

【생계비 절감】

- 주거급여 도입,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으로 서민주거비 절감
 -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
-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전국 확산 유도
 -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게재 수입 등을 활용한 대학교재 가격인하 유도
-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 확대
 -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관리 체계 강화

【생활밀착형 독과점 개선】

- (홈쇼핑) 증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 (항공서비스)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예: 항공기 중량비례),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
- (자동차부품 시장)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부품시장 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
- 구매·배송대행 불공정 약관 시정, 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 공개 등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수입시장 경쟁 촉진
-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문화 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

(3) 투자의욕 고취

◇ **新성장동력 확충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 ① (新성장동력 확충) R&D지원 혁신,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시장을 조기선점하고 창조경제로의 전환가속화 지원 지속

【R&D지원 혁신】

- (예 산) 산업수요 반영, 장롱특허 방지 등 R&D 혁신방안 마련(4월)
 - 정부 주도 Top-down식 과제선정(지정 공모형)을 **Bottom-up식**으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 **전환 확대**
 -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 논문게재·특허실적 보다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등 평가결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대*, 부진사업 중단 등 구조조정 추진
- * 연구원 기술료 수입에 대해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등
- (세 제)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5년→10년)

【미래성장동력 육성】

-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사업화 등 종합지원으로 新산업생태계 조성
 - 선제적 수요 창출과 인프라 조성 등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속인증제도 활성화 등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사물인터넷(IoT) 도입·활용이 유망한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15.上)
-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망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 기회로 활용
 -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공정 효율화, 탄소포집·저장(CCS) R&D,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제로에너지 빌딩 등
 - * 수송용 연료의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에 대비하여 바이오매스 기술개발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 * 기후변화 관련 사업모델 개발 등으로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지원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1전담 대기업 연계를 완료하고 지역대학, 출연연, 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R&D, 정책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15.上)
-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 등에 활용 지원
 - * 대학이 공유자인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지분양도, 사용권 허용 등

② (주력산업 혁신)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산단 혁신역량 강화

-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1월)
 - * 대-중소 협업 업종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우선 보급('15년 500개)하고 스마트공정 8대 핵심기술에 대한 R&D 집중 지원
- 핵심소재 개발, 시장선점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수요 창출, 원가절감, 인력난 완화 등 애로 해소
 - (반도체) 2호 반도체펀드(1,500억원) 출시 등 성장기반 강화
 - (조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확대 검토
 - (기계)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 개장
 - *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 제공(최대 2,000억원)
 - (철강·화학) 차세대 소재개발, 납사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공동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 지원
- 기반시설 개선 등 노후산단 리모델링('14년 9→ '15년 20개(누적)), 도시첨단산단 조성(6개 선정), 지역 특화산단 개발(5개) 추진

③ (대규모 투자 지원) 금융지원,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의욕 고취

-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산은, 15조원)을 마련*하여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 * 지원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중점 지원
 - * 기존 대출방식을 벗어나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 활용

-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가동 지원
 - 기존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既발굴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총 18건, 28조원 규모)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 신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실제투자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 강화 (☞ 상세 내용은 추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

◇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확립, 外投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촉진**

④ (규제개혁) 규제 총량제와 규제기요틴으로 핵심 규제 개선

- 기존 규제감축을 지속(17년까지 20%)하고 신설·강화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 전면시행(15.上)
- 경제주체들의 체감도 제고와 성과 가시화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 추진
 - 정책목적이 상충하는 일부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폐지 또는 대안 마련
 - 국민·기업·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건의자와 직접 연락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 해소

⑤ (시장경제 질서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실현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체감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위반시 엄중조치
 - 하도급 대금지급과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민관 **T/F**의 주기적 현장점검(6개월)·결과공개(2·8월)
-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등 경제민주화 잔여과제에 대한 입법화도 지속 추진

⑥ (외국인 투자 등) 외국인 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
 -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
 -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⑦ (해외진출 촉진) 전략적 FTA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FTA의 전략적 활용】

- 한-중·한-베·한-뉴 FTA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민관TF를 구성, 산업별 전략, 국내 보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기비준 추진
 - * 농수축산업·영세산업(섬유 등)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진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 등
- 컨설팅 등 원산지증명 지원 강화 및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섬유→농축수산물 등)하고 FTA China Desk(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지원 확대, Active-X 없는 결제환경,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을 통한 역직구 촉진
- FTA 허브 완성을 위해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추진

【신흥국 진출 확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가동('15上)
 - * 범정부 통합협의체인 '유라시아 경험 조정위원회' 출범,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확충 및 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정보포털 서비스 제공 등
 - 중앙아, 몽골 등과 초고속 통신망·전자통관 등 ICT, 방송 콘텐츠, 유라시아 환자유치 등 핵심 프로젝트 구체화
- 다양한 경험채널 연계·확대를 위한 신흥국 경험 로드맵을 마련('15上)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제고

-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EDCF와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공**
- * EDCF를 활용한 이차보전·보증제공·출자 등 지원방식 다양화, 중소기업 대상 EDCF 직접대출 도입, 중기 참여사업 EDCF 조건우대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25.5→26.5조원)을 확대**하고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12개법령 1,200여개) 합리적 재정비**
-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 진출의 편의성 제고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확대와 지역·공종별 편중완화**,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15上)**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KIC에 자산위탁 기관 확대**
-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IB업무 허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인수허용 등

◇ 중소기업·농수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로 산업 생산성 향상

- ⑧ (중소기업 지원) **상생투자를 촉진**하고 **장기근속 등을 지원**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참여기업 질적 제고, **훈련 내실화, 운영기관 전문성 강화** 등 참여자 능력개발 및 장기근속 지원
- ⑨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 **한-중 FTA 타결 등을 계기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추진**과 **도농간 격차 완화**
 - 우수 농수산업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투자 확대***,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과 대기업간 협력으로 유통·판로 지원 확산****
 - * 농식품·수산 모태자펀드 투자(누적, 억원): ('14) 2,464 → ('15) 3,607
 - ** 대한상의내 상생협력본부를 통해 '15년 10건 목표(농식품 6건, 수산 4건)
 - **농업 6차 산업 집적화 단지('14→'15년: 3→6개)·지역 컨소시엄(10→20개)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산업 6차 산업화 시범사업(5개소) 추진**
 - **농어촌 오지마을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와 농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 * 농산물 가공시설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규제 합리적 개선(예: 실태조사 후 일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10 (서비스업 육성) 제조업과 차별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지원 강화

【서비스업 차별완화】

-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
-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 해외사례, 기업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국가계약법령상 적정요율 도출

【유망서비스업 육성】

- 기 마련한 **5+2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14.8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 마련**('15.上)
 - *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5) + 물류, 콘텐츠 (2)
- **(관 광)** 관광호텔 공급 등 관광인프라 확충방안 마련('15.上)
 - 호텔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자금 유입 등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시내 면세점 허용
- **(의 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
- **(교 육)**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유학생 유치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관심분야인 새마을 운동, 경제발전, ICT 분야 등 교육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 지원
- **(금 융)**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15.上)
 -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체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서비스)**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5.上)

(4)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민간주도 임대주택산업의 유망산업 육성으로 주거안정 도모

- 1]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1월)
 - (규제개혁) LH 등 공공기관의 보유토지 적극 활용*, 택지 용지공급 조건 완화(할부조건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인센티브 제공
 - * 장기미매각 토지의 매각가능가치 재사정 등을 통한 용지할인매각 추진
 -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일괄) 공급 허용,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 개혁
 -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유지보수·하자관리 부담 등) 등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인프라 구축
 - (금융지원)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개선* 등 리츠·펀드간 격차 해소
 - * 현행 상장요건: 매출액 300억원 등/ 현행 1인당 출자한도: 40%
 - (세제지원)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 적용
 -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50→75%)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
 - (인프라 구축)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美·日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 검토
- 2] (수요기반 확충)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유인구조 설계
 - 보험사·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
 -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 다양화

3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①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 완화
 - (구조개선)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 (연착륙 등)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

- ②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
 - (한계기업)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 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 (일반기업)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 지원(假稱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 ③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마련
 -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용

(1) 가계부채 관리강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 완화

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관리

-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을 활용하여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약 40조원 규모)으로 전환 추진

-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금공*은 이를 매입·유동화하여 가계의 만기상환부담 완화

* 주금공 유동화 여력을 활용하고 필요시 지원여력 확충방안(추가출자, 주금공법 개정을 통한 수권자본금 한도[現 2조원] 확대 등) 검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

* (현행) 일정 기준소득(1,856만원) 이상시 초과분의 20% 이상 일률상환
(변경: 예시) <기준소득 150%이하> 15% <150~200%> 20% <200%이상> 25%

② (가계부채 연착륙 등)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

-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확인 강화

-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자영업자 대출 통계 세분화 및 신용정보사 통계의 보완적 활용 등

-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 관리감독 강화*,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확산 방지

* 건전성 기준, 영업·불공정행위 규제 등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등

-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및 상환능력 평가 내실화

*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LTV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

① (한계기업)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건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 재평가·공시 등
(해운)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 선박은행(Tonnage Bank) 조성
(조선)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정상화

○ 한시법('15년말)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

- * (대상채권) 금융기관 채권→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
(대상기업)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모든 기업

○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② (일반기업)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 기반 마련

○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

- * 예)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완화(인수대가 주식가액비율 95→80%)

○ 기업이 新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假稱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 *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사업재편 업종에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추진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3) 자본유출입 대응

◇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마련

① (거시건전성 제도개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新외환전산망을 구축·운영
-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용
 -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변화에 맞추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
-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에 맞추어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 및 제도 개선

② (국제공조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입을 계기로 지역금융 안전망(CMIM**)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체계 보완

* '15년 공동의장국(韓·中·日중 1개국, ASEAN 1개국): 한국, 말레이시아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역내 긴급 유동성 상호지원체계

- ① (남북경협) 역내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 추진
 - *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 검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검토 등
 - 3통(통행·통신·통관)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을 지원
 - 남북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시 개성공단 **1단계 완료**(국제화 포함),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 남북협력을 확대
- ② (통일준비 역량강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주요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하여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내 협력과제 발굴
- ③ (북한주민생활 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개성공단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모성 및 영유아 영양·건강개선 등) 시범 실시
 -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 마련, 산림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등 남북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 협력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구축

◇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

- 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 분야의 체질개선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조성
- ② 금융 - 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구현
- ③ 내수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초가 튼튼한 경제

-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효과성 향상
 - 공공기관 정상화
- ▶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 노동시장 구조개혁
 -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 여성경활참가 확대
- ▶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 교육시스템 개편

역동적인 혁신 경제

- ▶ 금융역동성 제고
 - 경쟁촉진
 - 외환규제 개선
 - 모험자본 활성화
 - 정책금융 효율화 등
- ▶ 투자 의욕 고취
 - 대규모 투자지원
 - 규제 개혁
 - 시장경제 질서확립
 - 외국인 투자 등
 - 중소기업 지원
- ▶ 산업경쟁력 강화
 - 신성장동력 확충
 - 주력산업 혁신
 - 해외진출 촉진
 -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
 - 서비스업 육성

내수·수출 균형 경제

- ▶ 확장적 거시정책
- ▶ 소비 여건 개선
 - 소득 향상
 - 배당 확대
 - 연금보장 강화
 - 일자리 확대
 - 생활물가 안정
-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 수요기반 확충
- ▶ 리스크 관리 강화
 - 가계부채 관리강화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자본유출입 대응

통일시대 대비

- 남북경협 · 역량강화 · 생활지원

V. 2015년 경제 전망

- ① **(고 용)**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
 - 고용률(15~64세)은 금년(65.3%)보다 **0.9%p** 수준 개선된 **66.2%**
 -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 ② **(성 장)**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
 - 내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간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했던 내수 증가율이 **GDP 성장률 수준으로 상승**
- ③ **(물 가)** 내수 개선, 담배값 인상 등 상승요인이 확대되나, 유가하락 영향으로 **2.0%** 상승
- ④ **(경상수지)**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유가하락이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하여 **820억불**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교역 회복으로 **3.7%** 증가, 수입은 점차 개선 되겠으나 유가하락 영향으로 수출보다 낮은 **3.2%** 증가

2015년 경제전망

	2014년	2015년
▪ 취업자증감(만명)	53	45
고용률(% , 15~64세)	65.3	66.2
▪ 경제성장률(%)	3.4	3.8
▪ 소비자물가(%)	1.3	2.0 ¹⁾
▪ 경상수지(억불)	890	820

1) 담배값 2천원 인상효과(+0.6%p) 포함

<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 >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기'입니다.

내일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가운데
내수부진으로 활력을 잃은 경제도 회복시켜야 하는
한 눈에 보기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튼튼한 뿌리'의 힘으로
고고한 기상을 뽐내는 매화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십시오.

위축된 심리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어려움은
정부가 한 발 먼저 나서서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별첨 >

-
1.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

- ◇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 '15년 주요 리스크로 전문가들은 내수부진 등에 따른 저성장·저물가 지속, 일반국민은 고용불안으로 평가
- ◇ '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회복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 병행 필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노동·금융·교육 등 부문에 중점
- ◇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에 지속적인 정책 노력 필요

① ('14년 평가) 전문가는 '13년 대비 '14년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8.9%	38.6%	52.5%	6.5%	46.8%	46.7%

- (정책평가) 공공기관 개혁·FTA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FTA확대	금융보신 주의효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28.1	26.4	23.8	9.2	54.5	5.6	5.9	5.6	27.4
일반국민	29.1	18.0	25.0	10.3	25.3	6.3	28.7	16.7	5.9

② ('15년 경제여건) 우리경제가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주로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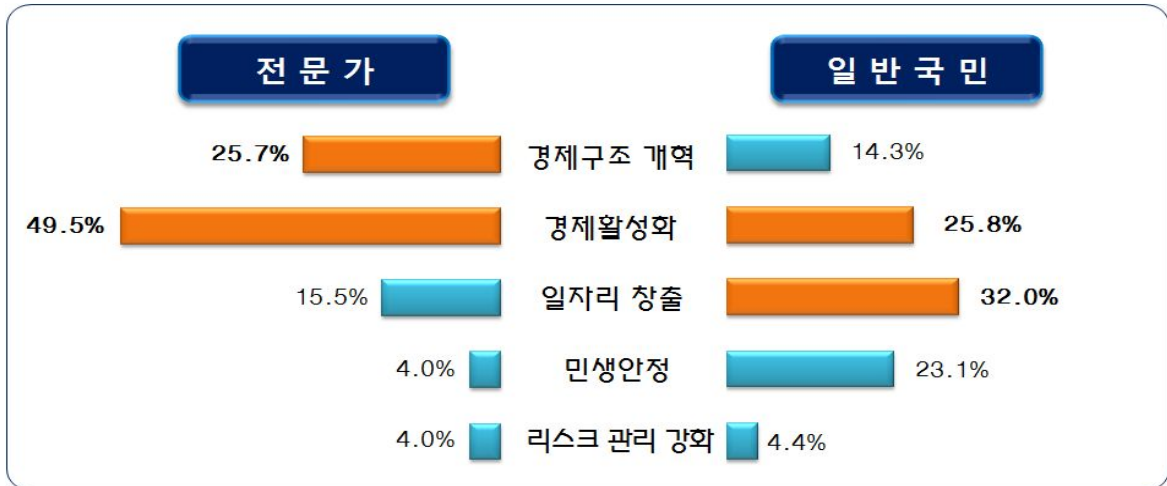
-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주요 리스크로 평가

(%)	재정건전성 악화	저성장·저물가기조	수출증가세 둔화	고용불안	내수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전·월세 불안	제조업 실적둔화
전문가	9.2	17.2	5.9	12.9	27.7	16.5	2.6	7.3
일반국민	10.8	10.0	5.7	26.4	10.8	19.4	13.6	2.2

1) 기재부-KDI 공동으로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300여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14.12월)

③ **(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응답**

○ 일반국민은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에 높은 관심 표명



③ **(중점 구조개혁 분야)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일반국민은 금융·교육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관심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	서비스부문
전문가	51.5	21.5	9.9	8.3	7.6
일반인	39.6	27.4	13.4	14.2	4.6

① **(공공부문) 전문가들은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를 일반국민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	방만경영근절 · 부채관리	비리·불공정 거래 근절	기능조정	국고관리 강화	지역연금 개혁	정보공개 확대	공기업 민영화
전문가	42.9	8.6	15.8	14.2	13.9	1.0	2.0
일반인	18.9	38.2	6.2	16.5	15.5	1.8	2.3

② **(노동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 비중있게 응답

(%)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보호수준 완화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직업 훈련 내실화 등	신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임금피크제 등 정년보장	확산
전문가	21.8	9.2	20.8	16.5	2.0	18.2	9.6	
일반인	31.7	6.1	25.5	11.9	10.0	3.9	8.7	

③ **(금융·교육부문) 일반국민들은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활성화, 교육부문은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1. 1/4분기 주요 추진과제 (39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1) 1월 (1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 방식 도입	중기청, 미래부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	금융위
▪ 세컨더리펀드 조성계획 수립	중기청, 금융위
▪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 확대	금융위
▪ 고등전문대 시범도입	교육부
▪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미래부
▪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기반 확대	국토부 등
▪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국토부, 산업부
▪ 임금체불 해소	고용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고용부, 교육부, 중기청, 산업부
▪ 리츠 상장요건 · 출자한도 개선	국토부, 금융위
▪ 제조업 혁신 3.0 성과 가시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산업부, 미래부, 기재부 등
▪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 新외환전산망 구축	한은, 기재부

[2] 2월 (7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교육교부금 산정·배분 체계 개선	교육부
▪ 사이버대학 질 제고	교육부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기재부
▪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관세청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 금융지원 전략 수립	기재부
▪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기재부

[3] 3월 (18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보조금 총량제 도입 연구용역 발주	기재부
▪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및 외환업무 확대	기재부, 금융위
▪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기재부, 금융위
▪ 강소대학 육성 (2차년도 사업 실시)	교육부
▪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금융위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설립	금융위
▪ 주택연금 보장 강화	금융위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복지부, 금융위
▪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행자부, 산업부
▪ 수수료 관리체계 강화	기재부, 산업부 등
▪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마련	금융위 등
▪ U턴 기업 인센티브 확대	법무부, 중기청
▪ 주금공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전환 추진	금융위
▪ 자영업자 대출 통계 체계적 관리	금융위, 중기청
▪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
▪ 사업재편 업종 대상 전직지원 강화	고용부
▪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 외환전전성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2. 2/4분기 주요 추진과제 (29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1) 4월 (5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방안 마련	기재부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마련	기재부, 복지부
▪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복지부, 기재부
▪ 정부 R&D 혁신방안 마련	기재부, 미래부 등

(2) 5월 (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초중고 교과서에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교육부
▪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선 검토	기재부

(3) 6월 (2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기재부
▪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	국토부
▪ 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금융위
▪ 우수인재·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법무부, <u>교육부</u> 등
▪ 재정 조기집행 추진	기재부, <u>행자부</u> 등
▪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교육부, 국토부
▪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 ICL 확대적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u>교육부</u> 등
▪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특허청, 산업부 등
▪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업부, 기재부
▪ 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산업부, 외교부 등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온라인을 통한 逆직구 촉진	중기청, 농식품부 등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원체계 가동	기재부 등
▪ 신흥국 경험 로드맵 마련	기재부 등
▪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 규제 재정비	관세청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추가대책 수립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
▪ 국가·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조정	기재부
▪ 유망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기재부 등
▪ 금융상품자문업제도 도입 및 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위, 고용부
▪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금융위, 기재부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등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금융위, 기재부 등

3.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11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재정지출의 성과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기재부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단계적 확대	기재부, 국세청
▪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금융위
▪ 점수이민제 확대방안 마련	법무부, 외교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등
▪ 산학협력 선도대학 정부지원금 차등화	기재부, 교육부
▪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관세청
▪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위탁 기관 확대	기재부
▪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기재부
▪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통계청
▪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	국조실 등

4.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2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직역연금 개혁안 마련	국방부, 교육부
▪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시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촉진	기재부
▪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금융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IB 기능 강화	금융위
▪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금융위
▪ 정책금융 효율화	금융위, 중기청
▪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고용부, 중기청 등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한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법무부, 고용부 등
▪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법무부, 국조실 등
▪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고용부, 기재부
▪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계획 수립	교육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교육부, 고용부 등
▪ 조기취업자·경력자 등 채용 확대방안 마련	기재부, 고용부 등
▪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진학기회 확대	교육부
▪ 가을학기제 등 도입 검토	교육부 등
▪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 마련	고용부
▪ 특목고·자사고 학비 등 비교공시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확산	교육부
▪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복지부
▪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산업부, 기재부
▪ 기후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등
▪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애로해소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 농업진흥지역 농지규제 합리적 개선	농식품부
▪ ICL 최소의무 상환비율 차등 적용 근거 마련	교육부, 국세청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금융위 등
▪ 과세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기재부
▪ ASEAN+3 역내 위기 대응체제 보완	기재부
▪ GTI 서울총회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합의 등	기재부, 외교부 등